

2017년도 NPAC 회의 결과 및 시사점

KOPRI
극지연구소

김지혜

KMI 극지연구센터 연구원

제23차 극지법연구회

2017. 9. 20.

2017년도 NPAC

- 주제: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 지속가능한 북극을 위한 역량 구축
(Building Capacity for a Sustainable Arctic in a Changing Global Order)



세션	주제
정책	The Role of the Arctic in a Changing Global Order
1	Responsibl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Arctic
2	Sustainable Arctic Communities
3	Arct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Global Maritime Industries
4	Enhancing the Dialogue between Practitioners and Analysts

정책세션

- 핀란드
 - 북극이사회 의장국 프로그램은 국익보다는 AC의 이익을 반영
- 중국
 - 북극 이웃국도 북극의 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심각
 - 상호존중, 지속가능성, 협력, 상호이익
 - 과학, 국내 메커니즘, 국제협력
- 한국
 - 2차 기본계획 수립 중, 한·러·핀·덴·노르웨이 양자회의, 북극씨클지역포럼 등
 - 국제협력
- 미국
 - 현 정부의 북극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
 - 미국의 북극정책: 국가 안보 + 변화
- 러시아
 - 러시아 북극 개발 의지 강하나 저유가, 경제불황, 서방제재 등이 장애요인
- 캐나다
 - Simon's 보고서: A new Shared Arctic Leadership Model
- 연구자
 -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규모 및 지원 충분하지 않음
 - 북극 과학연구 기후변화만이 전부는 아님
 - 정보에 입각한 올바른 결정을 위해 정책-과학 간 대화 필요

세션1: 책임있는 북극 경제 개발

- 산업(Tero Vauraste)
 - 북극에 대한 비즈니스 윤리 규정이 필요(WTO, AEC 등 공동 개발)
 - 보호무역주의 우려: 북극의 지속가능한 투자와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기술과 제화가 제공이 가능한 자유무역주의 필요
 - "Pan-Arctic Free Trade Zone" 비전, PPP
 - Arctic 100 Expedition
- 캐나다(Victor Santos-Pedro)
 - 북극권에서 사업하거나 살기에 비용이 높음
 - 광물, 석유, 가스 개발은 주로 수출용이기 때문에 관련 개발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필요와 영향보다는 외부요소를 우선 고려. 지역적, 전체적인 관점 필요
 - 캐나다의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프레임워크: CanNor(Canadian Northern Economic Development Agency), Northern Projects Management Office
 - 성공사례: Baffin Fisheries Coalition(Land Claims 권력이양, 중소기업을 위한 민간자금, 협력 의지, 이누이트 사업정신)
 - 인프라 구축 필요: Inuvik-Tuktoyaktuk 도로
 - CCG 쇄빙선 6척 보유, 비상시 통합계획 미비
- 미국(Brooks Yeager)
 - 트럼프: 적극적인 에너지 개발 정책, 오바마의 북극해 시추 금지 조치 철폐 등에도 불구하고 북극의 경제개발 환경은 지난 8년과 많이 다르지 않을 것
 - 저유가, 북극에서 석유 및 가스 개발에 따르는 높은 비용, 비싼 운송 비용
 -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북극경제 개발 가능: 북극경제를 국내 경제에 통합, 통신발전, 항만 발전, 통합적이 적분방식(북유럽 VS 북아메리카)

세션1: 책임있는 북극 경제 개발

- 러시아
 - 북극경제는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(GDP의 15% 차지)하며 재원을 유치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북극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함
 - 세계경기가 좋을때도 북극이라는 환경, 지리적, 기술적 등의 요인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, 서방의 기술 제재, 불경기 등의 요인이 상황 악화
 - 카라 해상 프로젝트 포함 현재 해상사업은 중단
 - 대안: 8개 북극지원구역(Arctic Supports Zones) 지정 및 집중 개발
 - PPP 모델 개발
- 한국(김성진 장관)
 - 한국은 북극 항로 개척, 자원개발 가능성에 가장 관심
 - 북극투자 규약: 지속가능한 북극경제개발의 지침서로 활용
 - 한국의 북극경제개발 참여분야는 주로 해운과 조선
 - 에너지개발프로젝트 미참여, KOGAS-AGDC MOU(2017)
 - 지속가능한개발: E-navigation, PPF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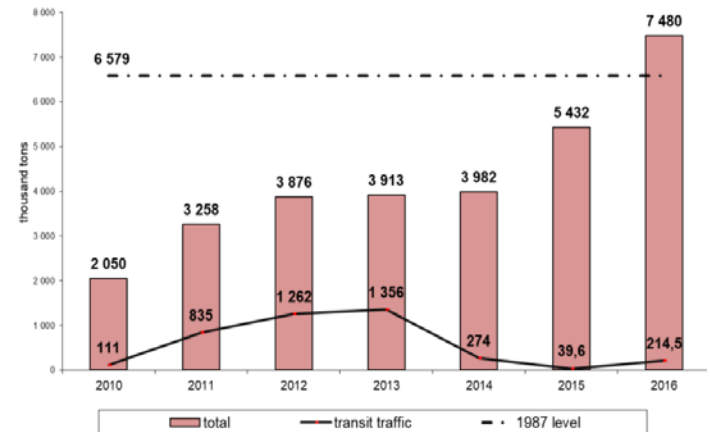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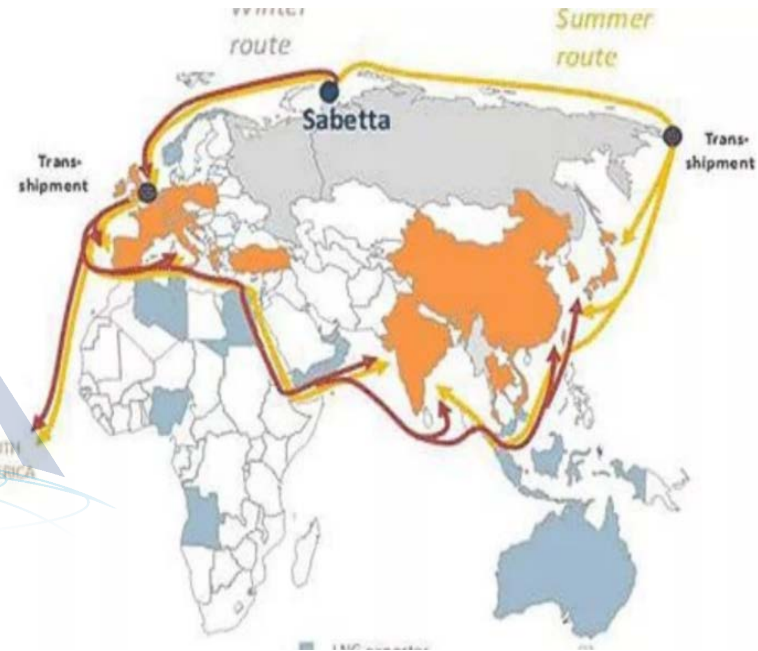


세션2: 지속가능한 북극 지역사회

- 북극에 관심을 갖는 주체들은 주로 북극권 이외 지역 사람들이며, 이들의 결정이 북극권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침
- 원주민을 고려한 북극경제 개발 중요- 원주민의 자기결정권(Circumpolar Inuit Declaration on Sovereignty in the Arctic,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, Inuit-Crown Partnership Declaration (2017))
- 기후변화 영향 심각, 화석연료 없는 북극 만들어야
- 원주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은 상의해야 - 미국의 경우 i) 미 북극대사가 원주민들과 상의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수립 또는 ii) 외무부가 유엔 사업과 관련하여 원주민들과 상의
- 현재 북극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모니터링하는 지표가 미비함
 - ADHR 사회 지표 있음. 사회-생태학적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필요
- 러시아 북극권 원주민들은, 소련시대 때 러시아 시민들과 동일한 권리를 얻었지만, 대신 자치권, 원주민땅에 대한 권리 등을 잃음. 세계화는 이러한 권리 박탈과정을 심화시키고 원주민들의 정체성에 위협을 주고 있음

세션 3: 북극과 세계 해운산업

- 북극 해운산업의 2개 주요 요인
 - 세계 해운 경제, 세계 원자재 수요 및 가격
 - NSR destinational shipping 증가
- NSR 개발 전망
 - 전략적 투자로 카라해지역 해운운송 활성화 예정
 - 야말 LNG 2017년부터 생산, 사베타 심해항, Arc 7 LNG선 구매, 등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로 인해 10년간 NSR 선박교통량 3배 증가 예상(+약 3천만톤 추가)
 - 향후 투자 계획
 - 기반반도 북극 LNG 2사업, 타미르지역 석탄운송을 위한 딕슨항 현대화 및 북극 쇄빙선 2척 추가 필요 (추가 3천만톤)
- 제약요인
 - 북극에 대한 정부예산 2100억에서 510억 루블로 삭감(사베타항과 딕슨항 개발, 북극권지역 철도 연결 사업 등을 지속 추진)
 - 연중 운항가능 쇄빙선의 건조 계획 지연
 - LNG2 투자금 유치?
 - 서방 제재, 유빙 증가 등



- 제약 극복 방안
 - 일부 항로 구간만 이용
 - 4차 산업 혁명 기반 기술(AI, IoT, ITS, 무인운전기술)을 활용한 항만, 물류인프라 구축
 - 적용가능: 드론, 무인트럭운전, 무인선박, PPF, 스마트 운송시스템 등
 - 물류네트워크 및 물동량 형성
- 북극 인프라 네트워크 개발에 대해 논의할 때 세계 자본과 북극지역 사회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북극연안과 육상 연계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진함
- 또한, 역내 운송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음(지역사회간 경제적 연결보다는 지역-세계시장 연결에 더 관심)
- 북극지역의 자원개발 사업은 원주민과 환경에 이득보다는 주는 피해가 큼

세션4: 정책-과학 연계성

- 과학은 선형모델, 정책은 민주주의/다원주의 모델
- 정책가-연구자 대화 증진 필요
 - 북극이사회: 75개 사업 중 과학자의 기여가 중요한 사업은 26개, 중간 수준은 24개로 평가, 특히 ACAP, AMAP, CAFF에서 많은 수요
- 북극이사회 WG 사업과 한국의 과학연구계획 간 연계성 미흡
 - 과학자문그룹 설립?
- CNARC 사례(중-노르딕 협력)
 - 2013년 설립, Arctic Center, Ulapland, FNI, Icelandic Center for Research,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(덴), NPI, Swedish Polar Research Secretariat, UiT w/ 6개 중국 연구소 및 대학
 - 협력분야: 공동연구수행, 북극연구 네트워크 구축 (인적교류), China-Nordic Arctic Cooperation Symposium 등 개최, 정보공유 및 문화교류
 - 효과: 거버넌스 지식이 비북극권 국가에게로 확대, 중국정부는 북극협력에서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

